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조세 사기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 포함된다고 발표

파렴치한 세무 대리인에 대한 새로운 형사 법률 제정

*대리인은 거짓 세금 신고서를 **10**건 이상 신고 시 형사 책임을 져*

예산은 세금 사기에 관한 형사 법규를 명확히 하고 업데이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 세금 사기를 완화하고 세무 대리 업계의 불법 행위자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혁은 뉴욕에서 파렴치한 세무 대리인이 사기성 환급을 받기 위해 사기성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환급 공장(refund mills)"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무부(Tax Department)는 종종 이러한 전략을 파악하고 사기성 환급을 방지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대리인을 처벌하고 과소 신고된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지불식간에 연루된 납세자를 보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 사기는 근면하고 법을 지키며 규칙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는 뉴욕 주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는 법을 어기고 그 과정에서 뉴욕 주민들을 약탈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이번 개혁을 통해 범법자들을 솎아내고 파렴치한 세무 대리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은 두 가지 새로운 범죄를 만듭니다.

- 각 환급에 실질적인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납세 책임을 회피 또는 줄이거나 환급을 부풀리려는 의도로 실질적 정보를 생략한다는 것을 알고 50건 이상의 환급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C급 중범죄(Class C felony)인 제1급 세무 대리 범죄.
- 각 환급에 실질적인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납세 책임을 회피 또는 줄이거나 환급을 부풀리려는 의도로 실질적 정보를 생략한다는 것을 알고

10건 이상의 환급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D급 중범죄(Class D felony)인 제2급 세무 대리 범죄.

또한, 예산은 뉴욕주 세법의 다양한 사기 법규를 업데이트하여 사법 혼란을 야기한 문구를 제거하고 개인이 주의 조세 부채를 빼앗거나 사취하는 모든 세금 사기 행위에 세금 사기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세무부는 사기 행위자가 불법 세금 환급에 대한 신청과 함께 거짓 환급을 신고하거나 환급을 모두 신고하지 않는 세금 전략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나, 세법의 규정은 때때로 법적으로 그들이 형사상 세금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실제로 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해석되어 환급 사기가 이 법 아래에서는 기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은 이러한 법규에 따라 모든 세금 사기 행위가 기소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